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이후 정책기관의 정책 대응과정 분석

박 형 목

강원지방중소기업청 근무

E-mail : bamboopark@smba.go.kr

.....

2008년 9월 15일 Lehman Brothers의 파산이후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은 급격히 증대되었다. 각국의 금융시장 안정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주식시장은 급락과 급등의 불안한 모습을 보였으며, 미국 금융시장의 불황으로 달러화에 대한 신뢰도가 급격히 하락하여 달러화는 주요 통화대비 약세로 전환되었다. 이와 관련 본 연구는 리먼사태 이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이후 정책당국이 대응한 정책들에 대해 보도자료 등을 통해 분석을 하였으며 여러 가지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여러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한계점을 언급하고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의 연구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색인어) 글로벌 금융위기, 중소기업 유동성, 신용보증,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KIKO)

I. 서 론

2007년 서브프라임 문제 발생 이후 각국 정부의 대응에도 불구하고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지속적으로 확산되었다. 2007년 4월 HSBC의 서브프라임 손실발표, New Century Financial(2위 모기지 업체) 파산 등으로 서브프라임 문제가 최초로 부각되었으며, '07년 6월 Bear Stearns(5위 투자은행) 산하 2개 헤지펀드의 청산위기로 서브프라임 문제가 본격화되었다. '08년 3월 300억불 규모의 Bear Stearns 구제금융 지원이후 금융시장이 다소 안정되었으나, 주택경기 침체로 시장 불안요인이 내재된 상황이었다. Fannie Mae 및 Freddie Mac에 공적자금 2,000억불 투입, Lehman Brothers의 파산보호 신청, Merrill Lynch 매각, AIG에 대한 850억불 투입 등 '08년 9월 금융기관들의 부실 문제가 재차 제기되면서 국제금융 시장 불안이 확산되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당국에서는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KIKO포함) 방안

(10.1), KIKO 등 파생상품 손실 거래소 상장기업 지원방안(10.15), 국제금융시장 불안 극복방안(10.19), 파생상품 평가 관련 회계처리 개선(10.21) 등 각종 정책적 대응 방안 등을 발표하였으며, 2009년에 들어서는 신용보증 비상조치 2009년 한시적 시행(1.8),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1.9, 2.12), 외화환산 등 관련 회계기준 확정(1.14), 중소기업 및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신용보증 확대방안(2.12),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확대(2.15) 등을 발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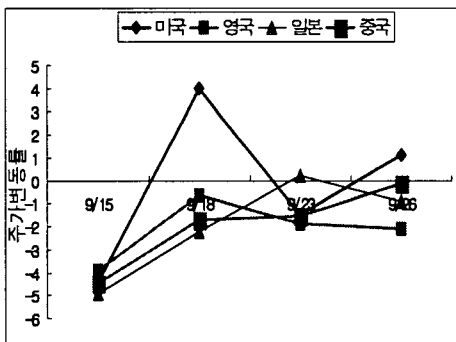
본 연구는 작년 하반기부터 발생한 금융위기에 대해 각 정책기관들이 2009년 2월 까지 발표한 보도자료 등을 통해서 정책대응 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정책 효과에 대해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II. 금융위기 발생당시 동향 및 대응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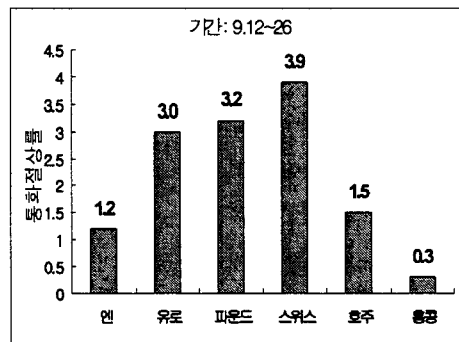
1. 금융위기 발생당시 금융동향 및 각국의 대응 현황

2008년 9월 15일 Lehman Brothers의 파산이후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은 급격히 증대되었다. 각국의 금융시장 안정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주식시장은 급락과 급등의 불안한 모습을 보였으며, 미국 금융시장의 불황으로 달러화에 대한 신뢰도가 급격히 하락하여 달러화는 주요 통화대비 약세로 전환되었다.

< 주요국 주가변동률¹⁾(%) >



< 주요국 통화 절상률²⁾(달러 대비, %) >



자료 : 1) 다우종합, FTSE 100, 니케이 225, 상해종합, 2)외환은행(16시기준)/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에서 발췌
2008. 9. 30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에서 발췌

안전자산의 선호로 미국의 장기국채 금리가 급락하였으나 일련의 시장 안정화 조

치로 다시 상승하는 등 변동성이 확대 되었다.(美 국채 10년물(%): (9.12)3.72 → (9.19)3.81 → (9.26) 3.86) 각국은 긴급 유동성 지원과 부실기관 정리 방안 마련 등을 중심으로 금융시장 안정화 조치를 단행하였다.

〈 금융위기 당시 주요국 금융시장 안정화 조치 내용 〉

국가	주요 내용
미국	· 씨티은행 등 10개 은행, 유동성 공급을 위한 700억불 펀드 조성 합의
	· 美FRB, AIG에 850억불 구제금융 투입
	· 美정부, 부실자산 인수 위해 7,000억불 공적자금 의회 요청
유럽	· 유럽중앙은행, 300억유로 규모 유동성을 단기금융시장에 공급
	· 영란은행, 50억파운드 단기금융시장에 공급
중국	· 인민은행, 1년만기 대출금리 0.27%p↓, 지급준비율 1%↓
	· 증권거래세 폐지, 국영기업 주식 매수 등 증시 부양책 발표
각국 공조	· FRB 등 6개국 중앙은행, 최대 1,800억불의 유동성 추가 공급

자료 : 국회 지식경제위 현안보고 2008. 9. 30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에서 발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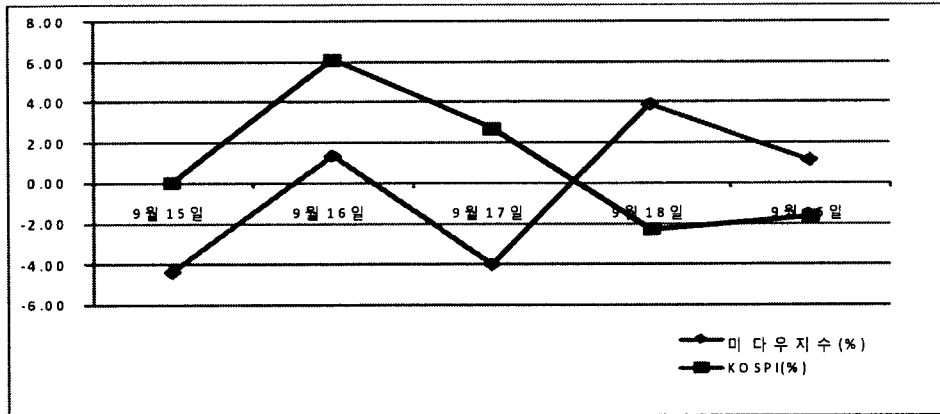
2. 금융위기 발생당시 한국경제동향 및 대응 상황

리먼 파산 등에 따른 국내 금융기관의 피해가 제한적이라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의 불안은 급격히 확산되는 상황이었다. 주가는 미국의 움직임에 따라 급등락을 반복하는 불안한 모습이었다. 환율은 달러화가 주요 통화에 대해 약세를 보이는 상황이었으나, 원/달러 환율은 신용경색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어 외국인 등의 주식 역송금 수요 등으로 인해 상승세를 보였다.(원/달러환율(원) : (9.12) 1,109.1 → (9.26) 1160.5, 51.4원 상승, 4.6% 증가) 금리도 단기자금 시장 경색 우려 등으로 인해 시장금리도 상승세를 보였다.

2008년 9월 30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 지식경제부 및 중소기업청이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금융위기가 본격적으로 발생한 9월중순 당시 수출 및 투자 등 실물부분은 특이 동향은 없었으나, 향후 미국 실물경기 침체정도와 중국 등 개도국으로의 확산가능성과 기업 자금사정 악화 여부 등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정책당국은 미국 금융위기와 관련하여 신속한 안정화 조치를 단행하였는데 그 주요 조치로는 리먼 서울지점에 대해 영업 일부정지와 긴급조치를 9월 16일에 실시하고, KIC 협상단을 뉴욕에 파견하는 등 메릴린치 투자수익을 보전하기 위

한 방안을 강구하였다. 그리고 9월18일에 단기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3.5조원 수준의 단기유동성을 공급하고, 외화스왑시장 참여를 통해 외화유동성을 공급하였다.1)



주: 금융위기 당시 주가 변동률 현황

3. 금융위기 발생당시 중소기업 자금동향 및 평가

(1) 중소기업 자금동향

중소기업은 대부분 대출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 조달은 2007년말 기준으로 1.7%수준으로 미미한 수준을 보이고 있었다.

〈 중소기업 자금조달 구조1) 〉

(단위 : 조원)

구분	'02	'04	'06	'07	'08.9.18 잔액
은행대출	202.9	245.2	303.3	371.7	417.0
직접금융2)	3.6	2.7	4.0	6.4	2.8
총계	206.5	247.9	307.3	378.1	419.8

자료 : 韓銀, 금융감독원, 2) 주식 발행, 회사채 발행, 벤처투자 합계

2006년~2007년간 중소기업 대출증가율은 45% 수준으로 명목 GDP 증가율 (12.2%)의 3.7배 수준을 보이는 등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했으며 2008년 1월부터 7월 까지의 기간에는 월평균 5.9조원이 증가하여 전년동기와 동일한 증가세가 지속되었다. 그러나 중소기업 대출은 8월 2.6조원 증가, 9월 3.0조원 증가에 그치는 등 전년

1) 국회 지식경제위 현안보고 “ 중소기업 자금관련 현안보고” 2008. 9. 30(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동기대비(8월 4.6조원 증가, 9월 4.5조원 증가) 증가세가 둔화되었다.

또한 당시 상황에서 미국 금융위기가 본격화 되면 금융권의 여신판리가 강화되어 중소기업 자금사정이 더욱 악화될것으로 전망 되었는데 이는 경기회복 지연에 따른 중소기업 신용위험 증가, Basel II 시행 등에 따라 은행들의 중소기업 관련 리스크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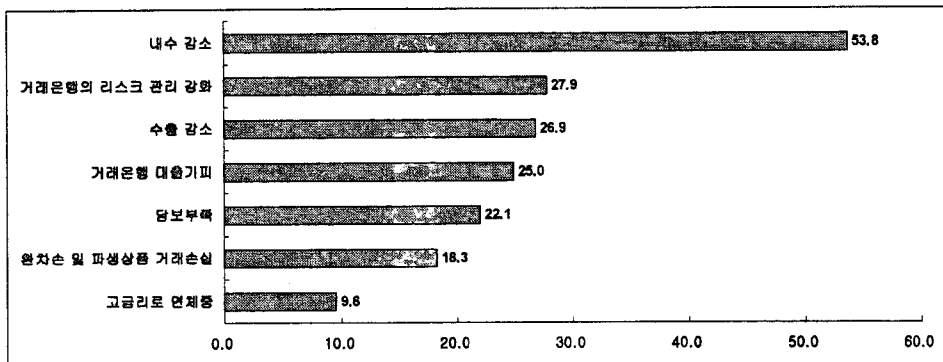
(2) 중소기업 중앙회의 「중소기업 자금애로 실태조사」 결과

2008년 9월 23일부터 24일간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154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긴급히 실시한 「중소기업 금융애로 조사」에 따르면 현재 자금사정이 심각하다는 중소기업이 68.8%를 차지했으며, 해당기업의 자금사정 악화는 경기침체로 인한 내수 감소(53.8%), 거래은행들의 리스크 관리 강화(27.9%) 등에 기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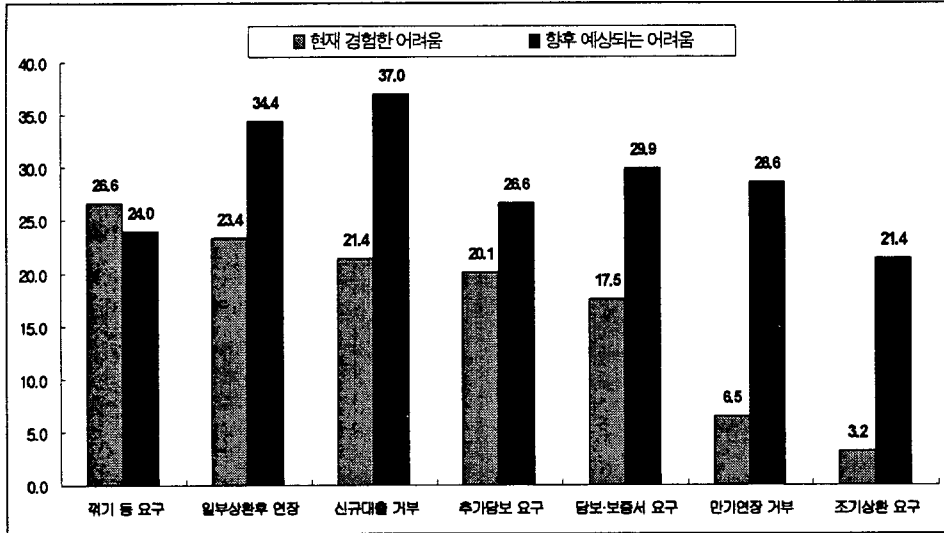
그리고 미국발 금융불안의 여파로 전체 중소기업의 81.8%가 경영활동에 영향이 클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부분별로는 자금조달 곤란(63.4%), 내수판매 감소(62.6%), 판매대금 회수지연(60.2%), 수출 감소(44.7%) 순으로 전망하였다.

중소기업들은 평소 금융기관을 이용하면서 예금가입 등 꺾기(26.4%), 일부상환(23.4%) 등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금융위기가 본격화 되면 금융기관 이용시 신규대출 거부(37.0%), 일부상환(34.4%), 담보 및 보증서 요구(29.9%) 등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 중소기업 자금사정 악화요인 >



〈 현재 또는 향후 금융기관 이용시 애로사항 〉



4. 금융위기 발생당시 KIKO 관련 동향 및 평가

(1) 중소기업의 KIKO 거래 현황(금융감독원 조사결과)

금융감독원 조사결과 2008년 8월말 기준 국내 은행의 KIKO 계약잔액은 79억달러(517개사)로, 이중 중소기업의 KIKO 거래규모는 59억달러(471개사)였다. KIKO거래 중소기업의 수출규모는 연간 204억달러로 평균 헤지비율은 42.1%수준이었으나, KIKO 잔액이 수출액을 초과(Over-hedge)한 중소기업은 56개사로 평균 헤지비율은 139.7%수준이었다.

〈 수출기업의 KIKO거래규모 ('08.8월말 기준) 〉

(단위 : 개, 억달러)

구분	업체수	계약잔액(A)	연수출액(B)	헤지비율(A/B,%)
중소기업	471(56)	59(13)	204(16)	42.1(139.7)
대기업	46(7)	20(10)	82(7)	36.1(181.5)
합계	517(63)	79(23)	286(23)	40.4(152.6)

주: ()내는 수출금액을 초과하여 과도계약한 업체

금융감독원의 평가에 따르면 2008년 8월말 기준(환율 1,089원) KIKO 거래손실은 1조 6,943억원이었는데 중소기업 거래손실은 1조 2,848억원이었으며, 실현손실은 5,062억원으로 평가되었다. 그런데 KIKO사태를 바라보는 금융감독원과 중소기업중

양회의 시각에는 차이가 있었다. 금융감독원 측은 환율상승에 따른 수출대금 환차익을 고려할 경우, KIKO거래 손실을 감안하더라도 2조 4,527억원 정도의 총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잠정 추정한 반면, 중소기업중앙회는 네고시 수출가격 할인, 수입결제환율 및 원자재 가격 급등 등의 기타 경영상 요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이 경우 수출기업들의 전체적인 환차익 효과는 미비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 KIKO 손익 현황(금감원, 8월말 기준) 〉

구분	업체수 (개)	계약잔액1) (억달러)	총손실(억원)	
			실현손실2)	평가손실
중소기업	471	59	△12,846	△5,062
대기업	46	20	△4,097	△1,372
합계	517	79	△16,943	△6,434

주: 1) 기업이 은행에 매도해야 할 콜옵션 금액기준, 2) '08.1~8월중 실현손실

(2) KIKO 거래에 대한 평가

금융위기 당시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기업이 은행과 합의를 통해 체결한 사적계약이라는 점에서 KIKO거래 자체에 대한 정부개입은 곤란하나 개별 계약건별로 은행의 불충분한 위험고지·계약강요·왜곡된 환율전망치 제공 등의 부당판매행위가 있었는지는 철저히 조사한다는 입장이었다.

〈 중소기업중앙회 對정부 건의사항 〉

- ◆ KIKO 피해 중소기업 지원대책
 - KIKO 상품의 불합리한 비대칭적 계약조건을 개선하고 계약 중도해지 허용
 - 긴급 구제금융 투입을 통해 거래대금을 무담보 장기대출로 전환
 - KIKO 피해 수출중소기업의 연쇄도산 방지를 위해 한시적인 외화대출 허용
- ◆ 중소기업 금융안정화 대책
 - 은행권의 중소기업 대출회수 자제, 韓銀 총액대출한도 증액, 신용보증 확대, 정책자금의 만기상환 유예 및 지원 확대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2008년 7월 24일 KIKO거래는 외환시장 여건에 따라 기업과 은행간 유·불리가 달라지는 것으로, 사업자가 조건에 관계없이 유리한 계약내용을 정하는 '불공정 약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다만, 은행들이 KIKO와 같은 고위험성 상품을 판매하면서 그 위험성을 고객에게 제대로 명시 혹

은 설명하였는지 여부는 법원에서 구체적인 심사를 판단할 사항이라고 하였다.

반면, 중소기업중앙회는 KIKO 손실은 은행이 파생상품 위험고지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Knock-in시 2~3배의 손실이 발생하는 내용등의 이익의 비대칭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불안정한 판매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는 입장이었다. 그리고 2008년 9월 25일 중소기업의 흑자도산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측에 “중소기업 금융안정 대책”을 수립할 것을 건의하였다.

(3) KIKO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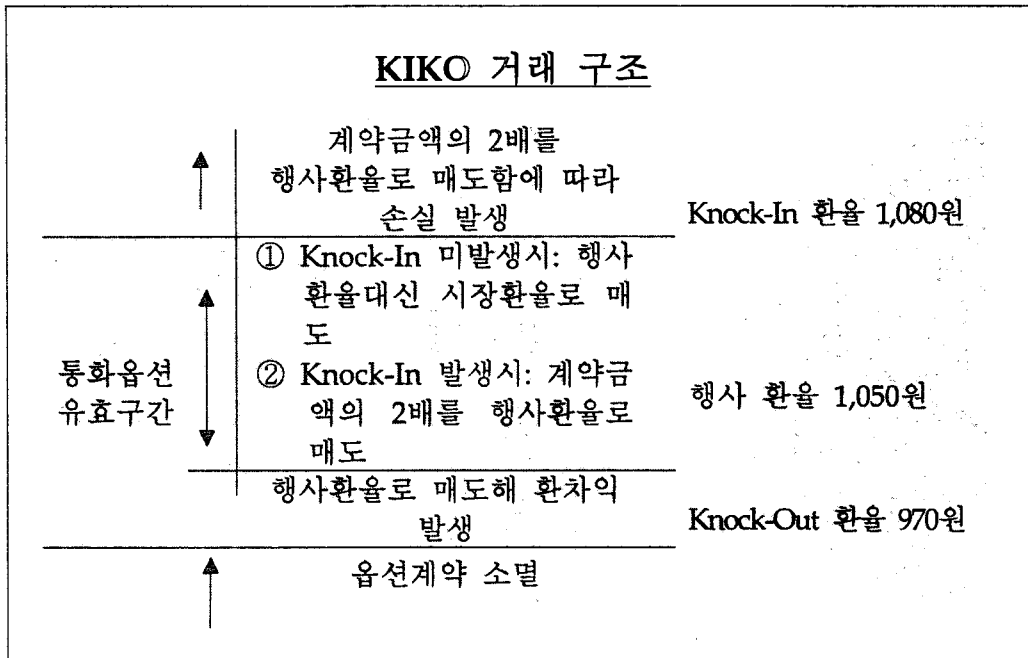
KIKO(Knock-In Knock-Out) 통화옵션의 거래 구조(예시) (계약조건)

- 계약당시 원/달러 현물환율 1,030원
- 계약기간 12개월, 행사가격(K) : 1,050원
- 계약금액 : 1백만달러, 단 Knock-In시 2배(2백만달러) 매도
- Knock-In(KI) 가격 : 1,080원, Knock-Out(KO) 가격 : 970원

- KIKO 통화옵션 거래의 경우 옵션계약 만기시 시장환율이 Knock-Out가격(예 : 970원)과 행사가격(예 : 1,050원) 이내에 있으면 은행으로부터의 풋옵션(행사가격에 의한 매도권리) 매입자(수출기업)는 행사가격과 시장환율의 차이만큼 이익 발생

그러나 환율이 상승하여 Knock-In가격(예 : 1,080원)에 도달할 경우 은행에 대한 콜옵션(행사가격에 의한 매입권리) 매도자(수출기업)는 통상 계약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달러를 은행에 시장환율보다 낮은 행사가격(예 : 1,050원)으로 매도해야 되므로 시장환율과 행사가격의 차이만큼 손실 발생

- 동 상품은 계약기간중 행사가격으로 달러를 매도할 수 있는 풋옵션(기업매입, 은행매도)과 환율이 상승해서 Knock-In되면 계약금액의 2배를 매도해야 하는 콜옵션(기업매도, 은행매입)이 결합
- 다만 계약기간중 시장환율이 Knock-Out가격에 도달하면 옵션계약이 소멸



자료 : 韓銀, 2008년 10월 27일 공보 2008-10-29호 보도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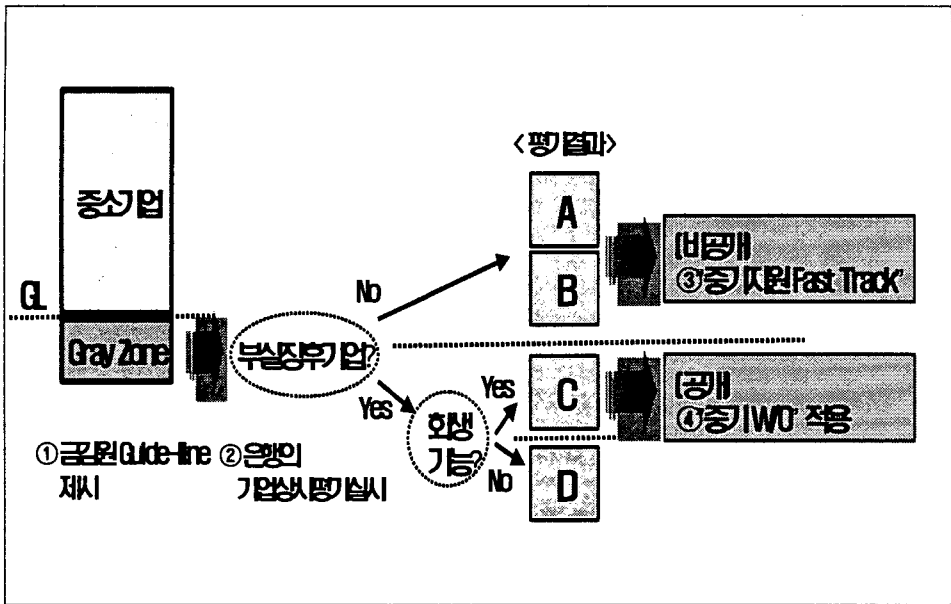
Ⅲ. 주요추진 대책

1.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KIKO포함) 방안('08.10.1)²⁾

(1) 은행 자율적인 유동성 지원

2008년 10월 1일 발표된 지원방안의 핵심은 은행의 자율적인 유동성 지원으로 은행이 기업 회생 여부를 판단하여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KIKO 포함)을 선별하여 신속하게 지원하는 방식이다. Fast track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기업을 4개의 등급으로 구분하여, A/B 등급은 중소기업 상황에 맞게 다양한 방법으로 신속하게 지원하고, C등급은 '공식 워크아웃절차'에 따라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D등급은 지원제의 및 퇴출하는 방식이다. 또한 정부는 은행의 리스크 부담완화를 위해 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증기금의 특별 보증을 활용하게 하였다.

2) 중소기업청,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공동 발표



자료: FAST-Track 지원절차

(2) 정부의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정부는 중소기업의 유동성지원 확대를 위해 첫째, 은행과 기업은행 및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중소기업 자금공급을 3.3조원 규모로 확대하였다. 둘째, 일시적 자금애로 중소기업에 대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희생특례자금'을 300억원을 확대하였다. 셋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공급규모를 연초대비 4조원 확대하였다. 넷째, 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규모를 1조원에서 1.5조원 규모로 확대하였으며, 업체당 지원한도도 기존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하였다. 다섯째, 모태펀드 가용재원 1천억원을 조기 집행하여 민간 벤처펀드의 투자재원을 확충하여 3천억원의 민간 투자재원을 결성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여섯째,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1조원 규모의 신규 'P-CBO'를 발행하고, 중소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지원하는 '유동화회사 보증제도'를 도입하였다.

2. KIKO 등 파생상품 손실 거래소 상장지원 지원 방안('08.10.15)³⁾

금융위기 당시에는 거래소 기업이 전액 자본잠식 상태인 기업에 대해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무조건 상장폐지 되도록 함으로써 회생기회를 봉쇄하고 있었다.

3) 금융위원회, 증권선물거래소

〈 당시 거래소 상장규정(75조 및 80조) 〉

- ◆ 최근 사업보고서상 자본잠식률이 50%~100%인 경우 관리종목 지정
- ◆ 2년 연속 사업보고서상 자본잠식률이 50%~100%이거나, 사업보고서상 전액 자본잠식된 경우에는 상장폐지

이와 관련하여 정책당국은 KIKO 등 통화파생 금융상품 손실 등으로 자본이 잠식된 상장법인에 대한 구제방안을 마련하였는데 주요내용으로는 자본잠식이 발생한 상장법인에 대해 이의신청기회 부여 및 개선기간 부과 등을 통해 상장폐지로 인한 기업부담을 완화하는 것인데 다만, 관리종목 지정(50%이상 자본잠식)은 투자자 주의환기 등 투자자 보호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현행대로 운영할 계획임을 밝혔다.

3. 국제금융시장 불안 극복방안('08.10.19)⁴⁾

주요 내용으로는 외화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내은행이 2009년 6월 30일까지 도입하는 대외채무 총 1,000억불 규모에 대해 3년간 지급보증을 함과 동시에, 정부와 한국은행이 은행권에 300억불의 외화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이며, 중소기업의 금융지원 확대를 위해 기업은행에 1조원의 현물출자를 지원하여 대출여력을 12조원 증가 효과를 도모하였다.

4. 파생상품 평가 관련 회계처리 개선('08.10.21)⁵⁾

첫째 비상장 중소기업중 현재 파생상품 평가손익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재무제표에 표시하던 기업에 대해 이를 주석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당시 규정은 비상장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회사가 중소기업 특례를 적용하지 않고 파생상품 회계처리를 한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파생상품 회계처리를 강제하고 있었는데, 과거 계약분에도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기업회계기준서 14호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하였다.

또한 상장기업은 회계정보의 국내외 비교가능성, 대외신인도 하락 우려 등을 고려하여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자본잠식의 경우 상장폐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5)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회계기준원

5. 총액한도대출 확대('08.10.23), 외화대출 용도제한 완화('08.10.27),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⁶⁾

한국은행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확대하기 위해 총액한도대출 규모를 당초 6.5조원에서 9조원으로 2.5조원 확대한다고 발표하였으며, 총액한도 지원대상을 현행 기업구매자금대출,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무역금융에서 추가적으로 '한국은행 총재가 정하는 금융기관 자금운용실적'을 추가하여 KIKO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국내 수출기업이 환헤지 목적으로 가입한 KIKO 등 통화옵션거래 결제 자금에 대한 외화대출을 허용하였으며, 운전자금 외화대출 상환기한 연장 허용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하고, 상환횟수 제한도 폐지하였다.

〈 외화대출 용도제한 조치 경과 〉

- ◆ 2007. 8.10 : 해외사용 실수요 목적 및 제조업체 국내시설자금으로 제한
- ◆ 2008. 1.28 : 비제조업체 국내시설자금 외화대출 허용
- ◆ 2008. 3.25 : 운전자금 외화대출 상환기한 연장 허용

그리고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2008년 10월 9일 0.25%p 인하(5.25→5.00%)하였으며 총액한도대출금리도 3.50%에서 3.25%로 인하 하였다. 10월 27일에는 기준금리를 0.75%p 인하(5.00→4.25%)하였고 총액한도대출금리를 3.25%에서 2.50%로 인하하였으며, 11월 7일에는 기준금리를 0.25%p 인하(4.25→4.0%)하였으며, 총액한도대출금리도 2.50→2.25%로 인하하였다.

6.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08.11.3)⁷⁾

2008년 11월 3일 발표한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의 주요내용은 외환시장 및 금융시장의 안정, 중소기업지원, 실물경제 활성화 등 세가지 부분으로 정리할수 있다.

첫째, 외환 및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 외국환평형기금 채권발행한도를 15조원에서 20.6조원 규모로 확대하였으며 수출보험기금의 수출보험 계약한도도 2008년 9월 130조원 규모에서 2009년 170조원 규모로 확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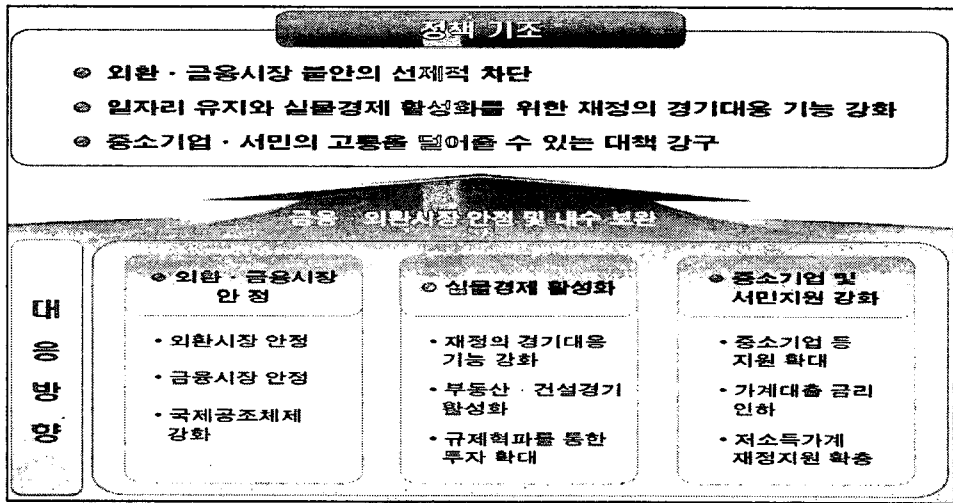
둘째,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산업은행(5천억원), 기업은행(5천억원), 수출입은행(3

6) 한국은행

7)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금융위원회 등

천억원) 등 국책은행에 1.3조원 규모를 출자하고,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에 5천억원을 출연하여 보증규모를 기존 42조원 규모에서 6조원 늘어난 48조원 규모로 확대하였다. 지역신보를 통한 소상공인 보증도 기존 7.1조원 규모에서 1.5조원 늘어난 8.6조원 규모로 확대하였다.

셋째, 일자리 유지와 중산·서민층 지원을 위해 11조원의 공공지출을 확대하기로 하였으며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간을 2009년 12월까지 1년 연장 및 적용대상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신규투자도 추가하였다. 또한 2009년 상반기 주요사업비의 60%내외에서 조기집행 할수 있도록 하였다.



자료: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 기본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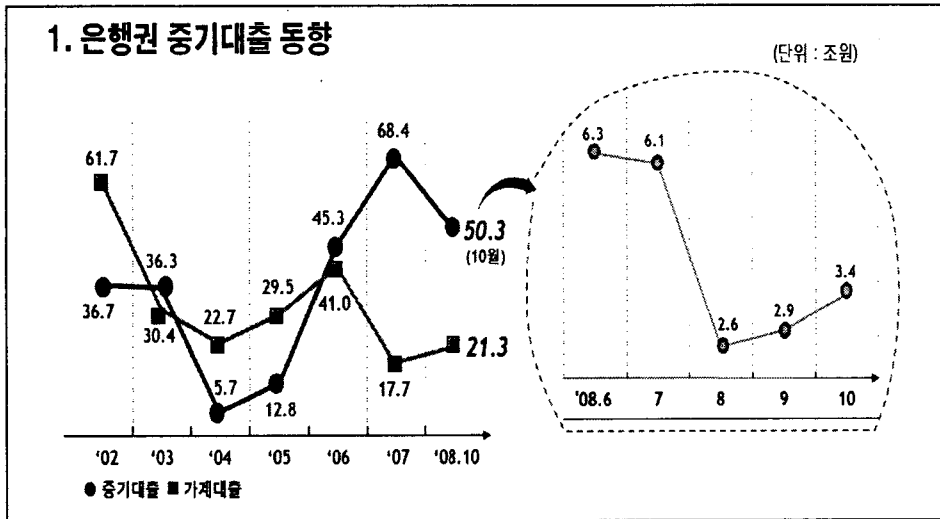
7. 중소기업현장대책회의('08.11.10)⁸⁾

주택담보대출규제로 2006~2007년 크게 증가한 중기대출이 급격히 감소추세에 접어 드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중기대출의 큰 폭 감소는 성장잠재력 위축으로 이어져 은행과 기업 모두에 부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연착륙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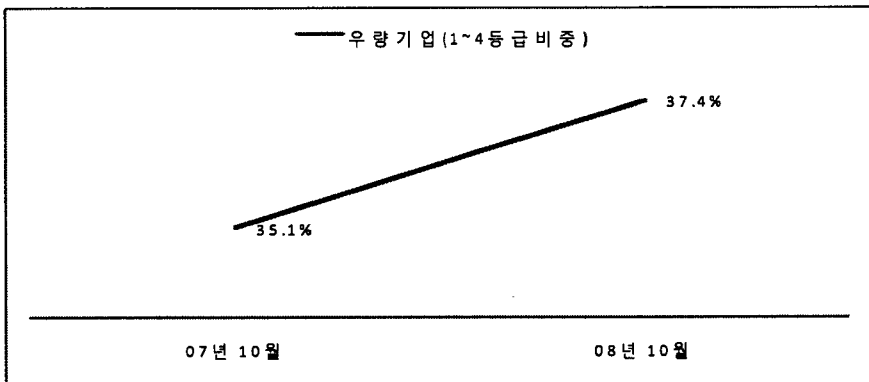
또한 중소기업 대출이 상반기 평균 5.9조원이 증가한데 비해 9월에는 2.9조원, 10월에는 3.4조원 증가하는데 그쳤는데, 이에 대한 주요 원인으로 첫째, 경기위축 및 은행건정성 악화(BIS 비율 하락) 우려에 따른 은행의 소극적 대출관행 때문으로 분석되었고 둘째, 대출도 우량기업 위주로 확대되고 신용도가 낮은 기업은 축소되는

8)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국세청 등

신용할당 현상이 심화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자금수요가 있는 기업의 조달여건은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2008. 11. 10 중소기업 현장대책회의



자료: 우량기업 대출비중 현황

셋째, 정부의 종합대책인 '중기 유동성 지원방안' 대책이 시행초기로 본래도에 오르지 못한부분도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현장에서 중소기업 정부대책 관련 참여의사는 69.8%의 기업이 기대를 보였으나 체감도는 만족스럽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 첫째, 국책은행 등을 통한 중소기업 유동성을 3.8조원 확대하기로 하였으며 둘째,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부분보증비율을 85%수준에서 95% 수준으로 확대하였다. 셋째, P-CBO 보증을 통한 중기 회사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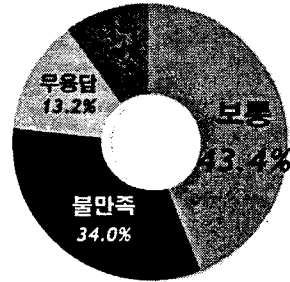
발행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하였으며 넷째, 경영이 어려운 기업에 대한 세금납부 유예 등 세정지원을하기로 하였다.

① 정부 대책에 대한 기대가 높은 편이나



< 정부 대책 참여의사 >

② 중기 자금사정의 실제개선은 아직 만족스럽지 않은 것으로 파악



< 정부 대책 체감도 >

'08. 10.21-22, 지방중기청, 중진공 공동조사, KIKO 거래기업 53개사

8. 은행 영업현장의 중기금융 촉진대책('08.11.26), 금융회사 임직원 면책제도 운영 : 2009년 말까지 한시 운용('08.12.30)9)

금융감독원은 은행 일선창구의 중소기업금융 촉진을 위해 다음과 같은 대책을 마련하였다.

첫째, Fast-track 프로그램에 따라 중소기업에 지원된 대출에 대하여 금감원 공문시행 등을 통해 '고의 및 중과실'이 없는 한 면책하기로 하였으며 둘째, 은행별 Fast-track 프로그램 지원실적을 매월 점검하여 실적이 미진한 은행에 대하여는 '현장점검반'이 집중점검하기로 하였다. 셋째 Fast-Track 프로그램 지원실적을 영업점 성과평가지 반영하여 인센티브에 부여하기로 하였으며 넷째, 은행 영업점에 중소기업 금융애로상담 안내표지판 설치, 담당직원 지정 및 운영, 안내 리플렛 등 대출상담 창구에 비치 및 교부를 통한 홍보강화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2009년말까지 한시적으로 금융회사 임직원 면책제도를 운영하는데 있어 그 적용 대상을 구체화 하였다.

9) 금융감독원

9. 외화환산 등 관련 회계기준 확정('09.1.14)¹⁰⁾

금융위원회는 한국회계기준원에 2008년 12월 26일에 외화환산·장외파생상품 관련 회계기준을 수정 요구한바 있으며, 이에 회계기준원은 2008년 12월30일과 2009년 1월 5일에 개정작업을 거쳐 2009년 1월 14일 금융위원회 회의를 통해 관련 기업 회계기준을 확정하였다.

2008회계연도 결산에 상기 개정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한국회계기준원은 확정된 기준을 신속하게 공표하였다.

(1) 유형자산 재평가 허용(기준서 제5호 '유형자산')

주요내용으로는 유형자산을 공정가액으로 재평가하고 재평가 증가액은 자본항목(기타포괄손익)으로, 재평가 감소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하였으며, 재평가는 유형자산 분류별로 수행하며, 공정가치 변동이 경미한 자산의 경우 3~5년주기로 재평가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같은 조치로 인하여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유형자산 재평가를 통해 자본을 확충, 보증기관 및 금융기관의 이용이 용이하게 될 수 있었다.

(2) 기능통화제도 도입(기업회계기준 69조의 2)

주된 영업활동을 해외에서 수행함에 따라 원화가 아닌 통화가 기능통화인 기업은 연중 회계장부를 기능통화로 작성·관리하고 연말에 표시통화(원화)로 환산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3) 외화위험에 대한 위험회피수단을 금융상품까지 확대(해석 53-70 '파생상품 등의 회계처리')

파생상품이 아닌 금융상품도 외화회피 수단으로 지정하여 공정가액 위험회피회계 또는 현금흐름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4) 확정계약에 대한 공정가액 위험회피회계 중단 시 회계처리 개선(해석 53-70 '파생상품 등의 회계처리')

확정계약의 위험회피 목적으로 체결한 파생상품의 중도 청산 등으로 위험회피회

10)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회계기준원

계 중단요건 발생시 확정계약 장부가액은 확정가액 실현시점에 손익으로 반영하도록 하였다.

(5) 비상장 중소기업에 대한 환율적용 특례(기준서 제14호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비상장 중소기업(금융회사 및 금융위원회 등록법인은 제외)은 외화 자산·부채 환산시 기말환율 대신 특정일자('08.6.30) 환율이 적용 가능하도록 하였다. 다만, '08.7.1. 이후 취득·부담한 외화자산 및 부채는 기말환율을 적용토록 하였다.(2008년도에만 적용)

(6) 비상장 대기업에 대한 장외파생상품 평가 특례(기업회계기준 제70조의 2)

비상장 대기업(금융회사 및 금융위 등록법인 제외)은 외화 위험요소가 포함된 장외 파생상품은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지 않고 공정가액정보 등을 주석기재하는 것을 허용하였다.(2008년도에만 적용)

10. 중소기업 및 영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신용보증 확대방안('09.2.12)¹¹⁾

정책당국은 사상 유례없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2009년말까지 한시적으로 긴급 보증지원 확대 조치를 강구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2009년도 만기도래 보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전액 만기연장을 해주기로 하였으며, 신규보증에 대해서는 보증심사 및 보증한도 등에 대한 기준을 대폭 완화하였다. 또한 수출기업, 녹색성장기업, 우수기술기업, 창업기업 등 성장기반 확충에 필요한 핵심분야와 영세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일정범위 내에서 100% 보증을 해주기로 하였으며, 일선 창구에서 신속, 과감한 보증이 이루어지도록 처리절차 및 시간을 대폭 단축하고 처리직원에 대해 면책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보증지원 확대로 재정손실과 기업 구조조정 지연이 초래되지 않도록 모럴 해저드 방지대책을 마련하였다. 부도, 법정관리 등 한계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워크아웃 등 구조조정 대상기업은 철저한 경영개선 노력을 전제로 지원하기로 하였다.

11. 각종 정책 발표이후 중소기업 대출동향 등

금융위기 발생이후 7.86%까지 올랐던 중소기업 평균 대출금리가 유동성 확대방

11)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안 조치 이후 5%대로 감소하였으며, 대출잔액 및 보증잔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점 등으로 볼 때 유동성 확대방안 조치가 어느 정도의 순기능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중소기업 대출동향〉

	'07년말	'08년말	'09년		
			1월말	2월말	3월말
대출잔액 (억원)	3,699,004	4,224,573	4,255,304	4,240,867	4,321,8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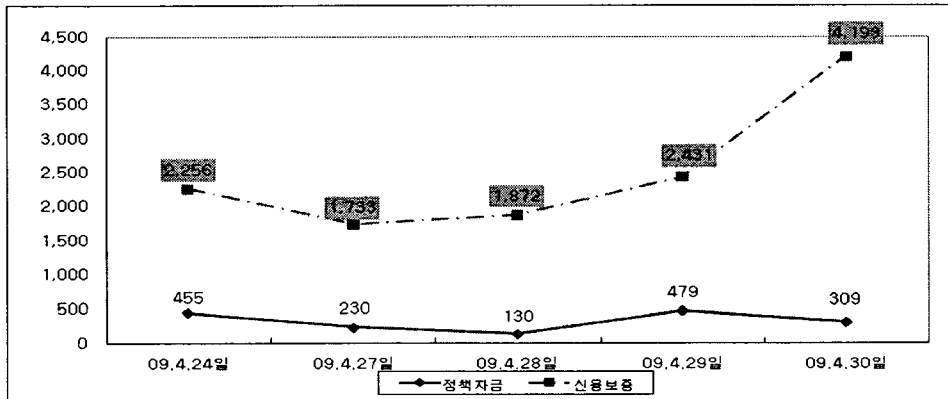
* 연체율(%) 추이 : ('08년 1.1, ('07. 6월) 1.0, (12월) 1.0 ('08. 6월) 1.1, (12월) 1.7 ('09. 1월) 2.4, (2월) 2.7, (3월) 2.3
* 이자율 추이

구 분	'07.12	'08.3	4	5	6	7	8	9	10	11	12	'09.1	2	3
중소기업	7.27	7.10	7.09	7.14	7.21	7.30	7.50	7.60	7.86	7.56	6.91	5.88	5.51	5.45
대 기 업	6.77	6.43	6.43	6.39	6.53	6.66	6.86	7.09	7.69	7.37	6.75	6.08	5.71	5.58

자료 : 금융감독원 자료

〈정책금융 지원 추이〉

(단위 :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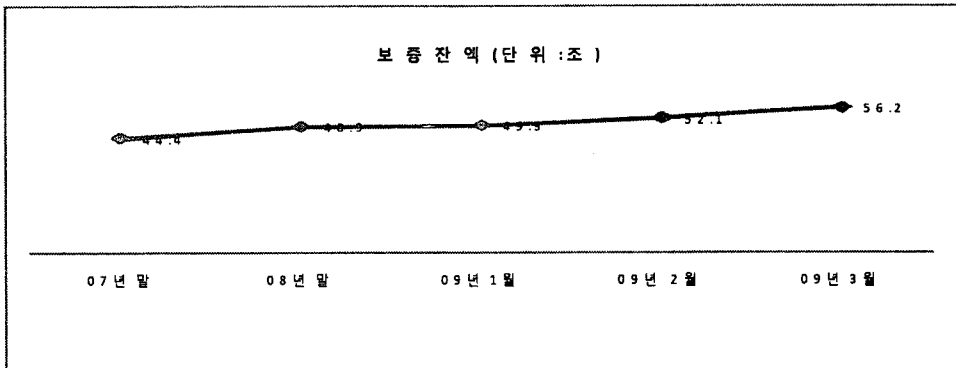
자료: 중소기업청 내부자료

주: 월별 정책자금 지원(억원)- ('07말) 28,431 → ('08년말, 마감) 29,287→('09년1월) 5,548→ ('09년2월) 13,240→ ('09년3월) 19,660

대출잔액도 2008년말 422조원 규모에서 2009년 3월말 432조원 규모로 확대되었고, 금융위기 발생당시 7% 후반대까지 올랐던 중소기업 대출이자율도 5%대로 안정되는 모습을 확인할수 있었다. 다만,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연체율이 2008년 6월 1.1%에서 2009년 3월 2.3%로 증가한 점은 금융위기의 여파가 여전히 지속되는 상

항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2008년말 48.9조원에 달하던 보증잔액도 2009년 3월에 들어서는 56.2조원으로 확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월별 보증잔액 추이〉



자료: 중소기업청 내부자료

IV. 결 론

본 연구는 금융위기 이후 정책당국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등을 통해 어떻게 정책적으로 대응하였는지 연구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가지고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소기업의 유동성지원방안 등 각종 정책들의 시행 후 대출잔액 및 금리등을 분석한 결과 각종 지원 정책은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책당국의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방안 등이 순기능으로 작용하기도 하였지만, 연체율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2009년 3월말까지는 금융위기의 여파가 아직 진행중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리먼사태 이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이후 정책당국이 대응한 정책들에 대해 보도자료 등을 통해 분석을 하였으며 여러 가지 시사점을 제공하였으나,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아래와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한계점을 언급하고 이와 관련한 앞으로의 연구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정책효과 대한 분석자료로 대출잔액 및 금리등의 효과만으로도 판단하는데 있어서의 한계이다. 좀더 거시적인 지표를 대상으로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지표 및 더 정확한 정책자료를 가지고 검증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 선택한 정책자료는 각 기관들에서 발표한 자료를 중심으로만 대상으로 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요인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글로벌 금융위기가 종료됐다고 평가되는 시점에서 좀 더 자세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참 고 자 료

<국내자료>

- 중소기업 자금관련 현안보고(국회 지식경제위) '08.9.30 ,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유동성지원(KIKO 포함)방안 '08.10.1 , 중소기업청,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KIKO 등 파생상품 손실 거래소 상장지원 지원방안 '08.10.15 , 금융위원회, 증권선물거래소.
 국제금융시장 불안 극복방안 '08.10.19 ,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파생상품 평가 관련 회계처리 개선 '08.10.21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회계기준원.
 총액한도대출 확대 '08.10.23 , 한국은행.
 외화대출 용도제한 완화 '08.10.27 , 한국은행.
 중소기업현장대책회의 '08.11.10 ,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국세청 등.
 은행 영업현장의 중기금융 촉진대책 '08.11.26, 금융감독원
 금융회사 임직원 면책제도 운영 '08.12.30, 금융감독원
 외화환산 등 관련 회계기준 확정 '09.1.14,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회계기준원
 중소기업 및 영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신용보증 확대방안 '09.2.12,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Politic confrontation process analysis of the authorities since global banking crisis occurrence

Hyeong-mok Park
Gang-won of SMBA

The uncertainty of international financial market was increased suddenly, since 2008 September 15th Lehman Brothers bankruptcy. In spite of the money market stabilization management of various nations, the stock market of the world was visible the features which slump and sudden rise are insecure. The reliability about dollarization was depreciated suddenly in depression of American money market, and the dollarization was converted with important currency comparison bearish trend. Relates with this, this thesis analyzed press information about the policies which the authorities confronts since global banking crisis after Lehman situation.

And it provided various current points. Despite these meanings, this research has several critical points. So this thesis refers the critical points and presets research direction In future.

Key Words: Global Banking Crisis, Liquidity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 Guarantee Fund, KIKO(Knock-In Knock-Out)